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이 책자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1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8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21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이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추진하였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1.5억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1.5~3억 (공시 1억~2.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 (공시 5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After

'21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과표	특례 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0.6~1.5억 (공시 1억~2.5억)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3억 (공시 2.5억~5억)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3.6억 (공시 6~6억)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2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10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으로
기부문화의 투명성이 저해되었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4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Before

'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 적용하였습니다.



24%
금리

After

'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 적용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0%
금리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5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하여 금융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조건	무주택 세대주(공동)	
① 우대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②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우대수준		
① LTV	50%	60%
② DTI	50%	60%
③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After

'21년 5월부터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구분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조건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9억 미만	
① 주택기준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동)	
① LTV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 DTI	60%	60%
③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1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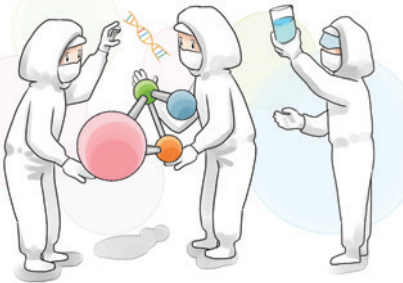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7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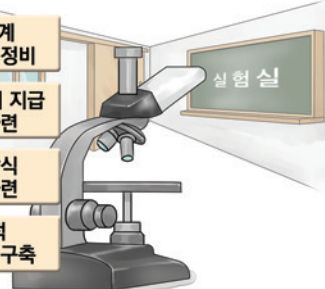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체계적 세분화가 미흡하였습니다.



After

'21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안전 그리고 내실화에 힘 쓰겠습니다.

- 분류체계
공시제도 정비
-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마련
- 지원 방식
기준 마련
-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6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Before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After

초등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 사전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12개 직종



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8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9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합니다.

•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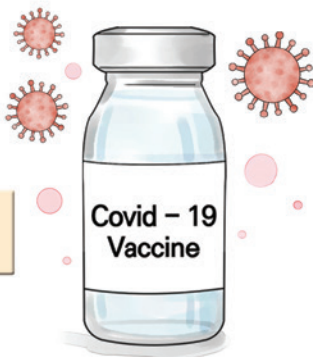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64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별 검증 시험장비 추가 · 신규 도입



품질관리

인프라구축

특수실험실
구축

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66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썬(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71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Before

그동안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4월 1일부터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77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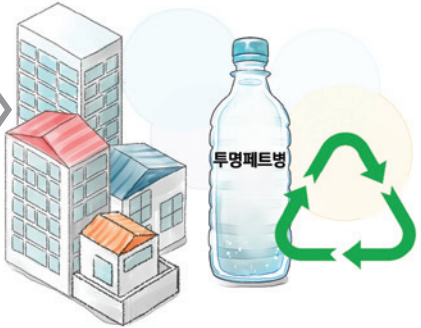
Before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After

'21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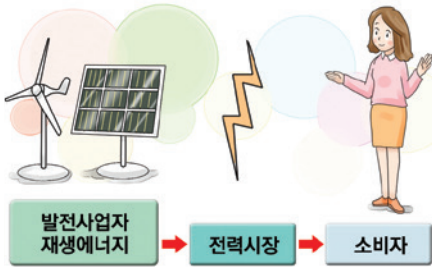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94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시행일 : 2021년 10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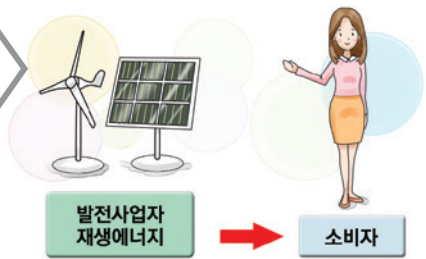
Before

그동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9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존에 법률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절차가 부재하였으나, 체계적인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활성화 하였습니다.



3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101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시행일 : 2021년 6월 23일

Before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허권자 생산능력	X	단위당 이익액
100개		10,000원/개
= 1,000,000원		

After

'21년 6월 부터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X	단위당 이익액	+
100개		10,000원/개	
초과분	X	합리적 로열티율	
9,900개		1,000원/개	
= 10,900,000원			

4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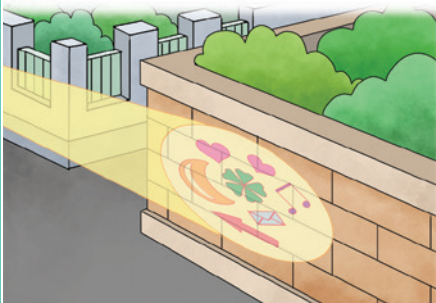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02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Before

지금까지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디자인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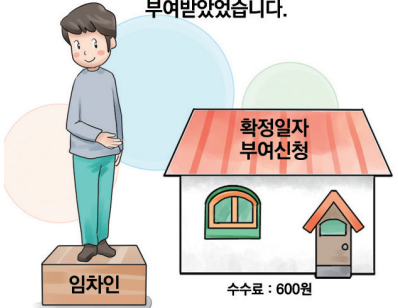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07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After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1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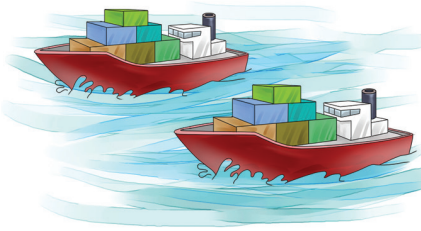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22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 시행일 : 2020년 8월

Before

'20년 8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평균 2척씩 투입하여 수출물류 적체를 완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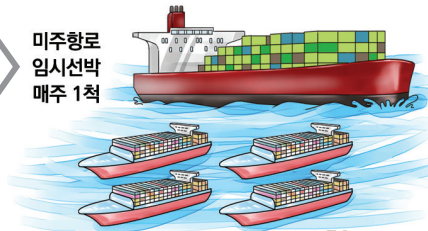


미주항로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After

'21년부터 선복부족 및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해상물류 지원을 강화합니다.

미주항로
임시선박
매주 1척



미주항로 임시선박 월 평균 4척

2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23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해수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1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7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16일

Before

지금까지 군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 실시
하였습니다.

군부대 입영신체검사



After

'21. 8. 16. 군부대 입영자부터 입영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장비 활용, 입영판정검사 실시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2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8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서울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하반기부터 더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주·대전 센터 추가 설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0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Before

기존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사건 등을 수사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After

'21년 6월부터는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재범억제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1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3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2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시행일 : 2021년 5월 17일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의 한계를 감안,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합니다.



4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7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5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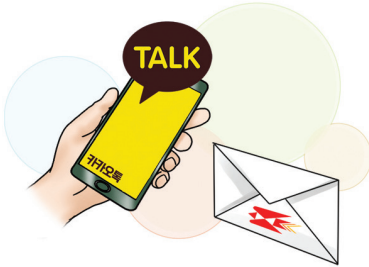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78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 → 네이버(2차) → 우편(3차) 발송 합니다.



6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9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성폭력 사건)
2021년 10월 21일(성희롱 사건)

Before

지금까지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합니다.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80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효과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8 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182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Before

지금까지는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9월 24일부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9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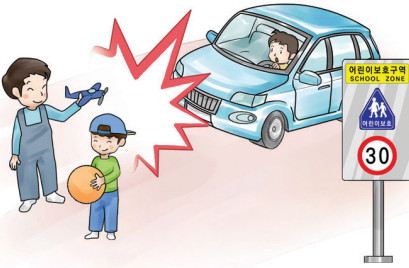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8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Before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0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98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201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명·익명처리 실습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기존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을 실무지원까지 확대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